

‘역사전쟁’ 與野, 총력 여론전

원로 학자·대표 집필진 찾아 간담회로 맞붙

김 “반드시 국정화”... 문 “폐기될 때까지 투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치열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22일 각기 역사교과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정교과서, 원로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전력을 쏟았다. 이날 연단에 오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와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행 검·인정 체계 역사교과서를 ‘독극물’, ‘역사방’ 등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국정화를 통한 역사교육 정상화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복 교수는 “전체적으로 현재 교과서는 반 대한민국, 친북한적”이라며 “지금

의 좌편향 역사교육은 학생들 뇌에다 독극물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일 교수는 “지금 한반도엔 남북 대립의 사상전이 ‘역사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좌편향, 반대한민국 역사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지향하고 자긍심을 자각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새누리당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뚝뚝 뚝뚝 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연합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에서 ‘한국사교과서 대표 집필진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행 7종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대표 집필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내현 고려대 교수와 도면희 대전대 교수, 주진우 상명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주진우 교수는 “지금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정부 여당의 요구가 100% 반영된 책이며 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였다”며 “그런데 교과서에 대한 시비가 나오면 이들이 오히려 좌편향됐고 북한 책을 옮겼다는 말을 앞장서서 한다”고 비판했다.

권내현 교수는 역사학계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국정제의 반민주성 ▲반시대성 ▲반헌법성 ▲역사교육의 황폐화 ▲정의적 사고 제한 ▲일본 우경화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국정교과서는 집필진 확보부터 당초의 명분과 의도를 관철하지 못할 것이며 교과서가 발행되더라도 편향, 획일화된 오류투성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고 해도 굴하지 않고 집필 거부운동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 쟁점으로 삼아 국정교과서가 폐기될 때까지 국민들과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집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3% “국정화 반대”

리얼미터 설문... 찬성 41.7%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주일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찬성’ 여론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0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예고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답변이 52.7%로 찬성 답변 41.7%보다 많았다. 지난 13일 조사 때는 찬성 47.6%, 반대 44.7%로 찬성 여론이 근소하게 앞선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35.2%, 반대 59.8% ▲경기·인천은 찬성 36.4%, 반대 58.3%로 수도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답변이 60%에 육박했다. 또 ▲광주·전남북은 찬성 26.0%, 반대 67.3% ▲대전·충청·세종 역시 찬성 44.1%, 반대 54.1%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 찬성 58.1%, 반대 34.3% ▲부산·경남·울산은 찬성 47.8%, 반대 44.7%로 영남지역에선 찬성 여론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세와 20대에서 찬성 21.6%, 반대 78.4%로 반대 비율이 압도적 이었고 ▲30대는 찬성 31.4%, 반대 65.4% ▲40대는 찬성 29.6%, 반대 66.5%로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반면 ▲50대의 경우 찬성 52.8%, 반대 37.9% ▲60대 이상은 찬성 67.5%, 반대 22.1%로 찬성 비율이 반대를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P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대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 선언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제작 강행시 어떤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서울대학교 역사학 관련 학과 교수들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역사교육과 김태웅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정화 예비비 44억 자료 제출하라”

野 교문위 “국회 예산심의권 무시...과정 규명 청문회 실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정부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의원 13명은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 내 협의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약 17억원이 개발·편찬비 명목으로 지출됐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부사업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상황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

는 예비비 편성 사유에 대한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정상적인 예비비 승인절차라면 13일 상정 이전인 8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됐을 텐데 이조차 정부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1년간 국정화 추진에 어떤 비밀작업이 있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당장 청문회 실시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종교인 과세,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총선 앞 여야, 정부 역할 기대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 상정,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형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히 난감해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개신교의 반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교계를 설득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2일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제1차에 나서려는 것이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대형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히 난감해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개신교의 반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교계를 설득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2일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김한길·안철수와 대화 나서야”

김부겸 “자기 희생의 ‘이순신 리더십’ 필요”

세정지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표에 대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억울해도 오로지 백성만 믿고 자신을 던졌듯 그런 리더십을 왜 못 보여 주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위기 시에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이순신 리더십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우선 문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고 나간 분들이 비주류의 대표 격인 안철수·김한길 전 공동대표부터

만나야 한다”며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다시 큰 테이블을 만들고 이야기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어떤 제안보다는 우선 대화해야 한다. 서로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야권 틀로만 갖고 그분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면서도 “아마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지경기자 jkpark@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평화공원 설치를”

임내현 새정치 의원 제안

세정지연합 임내현(광주 북구) 의원이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광주 민주인권평화공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이전한 광주교도소의 옛 건물 일부는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다”며 “광주의 여론을 고려해 기존 부지 3만평 중 일부에는 솔로몬 로파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

지는 광주시에 무상 양여해 민주인권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치소는 세로이 적정 부지를 11월 안으로 찾아 이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



밝은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했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368-1710~1711